

별첨

* 엠바고 : 2021.6.30.(수)
15:00부터 보도 가능

최고금리 인하 대응
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

2021. 6.

관 계 기 관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 및 개요	1
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

1) 예방·차단	3
----------------	---

2) 단속·처벌	4
----------------	---

3) 피해구제	5
---------------	---

4) 경각심 제고	6
-----------------	---

III. 향후계획	7
-----------------	---

I. 추진배경 및 개요

1

추진 배경

□ 7.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(24%→20%)가 시행

* 「대부업법 시행령」 및 「이자제한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

□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

○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 증가 가능

○ 특히,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*을 사칭하여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 증가 우려

*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음

- 최근 주요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

* ('20년 1~5월) 7.3만건 → ('21년 1~5월) 36만건

2

개요

□ 이러한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 선제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“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”을 운영

○ 7.1일부터 4개월(7.1일~10.31일)간 운영

○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*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,

* 작년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「불법사금융 근절방안」을 마련
①예방·차단 → ②단속·처벌 → ③피해구제 → ④경각심제고 순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강화·제도개선 추진

-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

참고

작년 하반기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운영 성과

- '20.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「불법사금융 근절방안」 마련하고 특별근절기간('20.6.29일 ~ 연말) 선포

* ① 예방·차단 → ② 단속·처벌 → ③ 피해구제 → ④ 경각심제고 순단계에 걸친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

-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특별근절기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·보완



※ '20년 하반기 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」 추진실적

- ① [단속]** 불법사금융업자 총 4,724명 검거, 49명 구속
 - * (경찰)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0% 증가한 4,670명 검거 (서울·경기 특사경)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 포함 총 54명 검거
- ② [광고차단]** 온·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.2만건 적발·차단 및 전화번호 6,663건 이용중지
- ③ [피해지원]** 금감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·상담 4,395건
 - 채무자대리인 지원 819건, 소송구조 18건
 -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72,943건(5,067억원) 지원
- ④ [홍보]** 전용 유튜브채널 「불법사금융 그만!」 개설·운영 및 대중교통(래핑광고)·라디오·전광판 공익광고 시행

Ⅱ.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

1 [예방·차단] 불법영업시도 차단

□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 강화

- 서금원에 신설된 '서민금융사칭 대응단'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앱*(App) 및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

* 불법사금융 앱의 이름·설명·이미지 부분에 서민금융상품을 사칭·도용

-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·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 검토

※ [예] ■ 화이트리스트 : 은행별 공식 전화번호(약 23만개)를 등록해 놓고 불법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에 활용 (번호 대조를 통한 신속차단 등)
■ Biz-RCS : 은행이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, 문자 프로필 부분에 고유한 브랜드 로고가 표시되어 사칭문자가 아님을 확인 가능

- AI로직 도입, RPA*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 고도화

* RPA(Robotic Process Automation) : 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·적출 시스템으로 SNS에 퍼져있는 불법광고·URL(연결링크)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 가능

□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 등 신속차단

- 금감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 시 방심위가 신속심의*하여 국내정보 삭제 및 해외정보** 접속차단 처리

* ('19년) 42.3일 → ('20년) 12.5일

** 해외 주요사업자(구글·페이스북 등)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삭제 유도 병행

-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 신속차단

□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 제고

-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* 포상 및 경찰청 신고 보상금 활용

* 기존에는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 건 위주로 포상

→ 향후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

- 비대면·분리조사, 가명조서, 경호·순찰강화, 보호시설안내 등 신변보호 조치를 불법사금융 신고에도 적극 활용

□ 단속 유관기관* 간 연계를 통한 총력대응

* [경찰]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(862명) 및 강력범죄수사대(1,019명)
경찰서 지능팀(1,826명)
[지자체]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[금감원] 불법사금융 신속대응반 등

-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·수색 추진, 폭행·협박·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

< 중점 단속대상 >

▶ [불법대부업]

-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
- 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
-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
- 불법 채권 양수도 및 불법추심

▶ [불법채권추심]

-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·협박, 심야 방문·전화 등 사생활 침해
-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고지
-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납치·감금·강간·강요 등 강력범죄 등

□ 민·관협업, 미스터리쇼핑 등 적극 활용

-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 모색
- * 카페 내 불법사금융업자 게시글·광고, 피해사례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의뢰
-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하여,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적극 활용

□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박탈

- 조폭·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 하여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*를 발본색원
- * 범죄단체조직죄,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중형 유도
-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·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
- 국세청 '민생침해 분석전담팀'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 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이득 박탈

□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

-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 가동 (1332 內 전용라인 개설)
- 금감원·지자체·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·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“찾아가는 피해상담소” 운영
-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률(채무자대리인·소송대리)·금융(정책서민금융상품, 채무조정)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

□ 채무자대리인 이용* 편의성 제고

* 지원건수가 ('20년) 915건 → ('21년 1~6.11일) 2,115건으로 크게 증가

- 신복위·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방법 다변화 (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이첩 사건 위주로 접수)
- 상담·신청창구 확대(지부 → 지부 + 출장소 + 지소) 및 처리기관 확대도 함께 추진(지부 → 지부+변호사가 배치된 출장소)

□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

-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, 햇살론15,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 추진

안전망대출Ⅱ	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받은 연 20%초과 고금리 대출의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들을 위한 한시적 대환상품
햇살론15	저신용·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금번에 기존 햇살론17(금리 17.9%)을 햇살론15(금리 15.9%)로 개편
새희망힐링론	불법금융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5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

-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불사금 피해자 대출제도 운영

* 5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 / '21년 하반기 총 500명 대상

□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 운영

- 각 기관별로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총력 홍보

금융위·원	전용 유튜브 채널(불법사금융, 그만!) 활용 및 보도자료·SNS 카드뉴스 배포 등을 통한 집중홍보 추진
방통위	불법스팸 피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방송채널을 통한 자막방송 및 전국민 대상 문자발송 추진
경찰청	홈페이지·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'불법대부업 특별근절·집중신고 기간'을 적극 홍보하고 범죄수법·예방법 관련 보도자료 배포
서금원	유튜브·SNS·대중교통광고 등을 통해 안전망대출II,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집중홍보
법구공	7월중 채무자대리인 사업 관련 지하철 래핑광고를 실시하고, 채무자대리 지원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

- 최고금리 인하 시행,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광고 주의, 피해신고방법 등의 메시지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·배포

※ [참고] 주요 홍보 메시지(예시)

❶ 7.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(24%→20%)가 시행됩니다.

-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- 담보권설정비용, 신용조회비용 등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.

❷ 정책금융, 금융회사 사칭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.

- 서민금융진흥원(국민행복기금 포함)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
-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는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❸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감원 1332로 신고해주세요.

- 상담을 통해 채무자대리인,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법률·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드립니다.

Ⅲ. 향후계획

□ 주기적인 실적·시장상황 점검

-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(매월) 점검

※ 4개월 간(~10.31일)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

□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지원

- '20.12월 국회에 제출된 「대부업법」 정부 개정안*의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
 - 동 법안 통과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6%(상사법정이율)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* 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

*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되어도 최고금리(24%)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

※ [참고] 「대부업법」 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

- ❶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취한 6% 초과 이자 무효화
- ❷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한 경우 및 계약서 없이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을 무효화
- 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(現: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改:5년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)